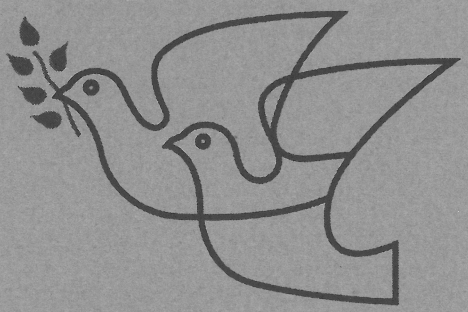
제6회 여성평화통일포럼(전문가포럼)

김대중 정부 평화, 통일 정책 평가 및 여성평화 통일운동



일 시 : 2002년 11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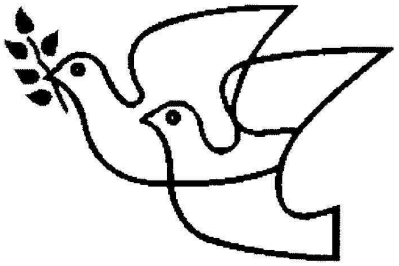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세미나실 (2층)

주 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 원 : 여성부

제6회 여성평화통일포럼(전문가포럼)

김대중 정부 평화, 통일정책 평가 및 여성평화통일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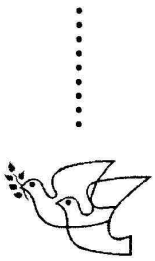


• 일시 : 2002년 11월 6일 수요일 오후3시-6시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세미나실 (2층)

•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원 : 여성부



행사내용

. 사 회 :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1부 소개 및 발제 (15:00~16:00)

인사 및 소개

주제발제 :

Ⅰ 김대중 정부 평화, 통일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Ⅱ 김대중 정부에서의 민간단체 여성평화 통일운동의 평가와 발전방향
정현백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부 종합토론 (16:00~18:00)

차 례

1. 참가자 ---------- 7

2. 발제문

I 김대중 정부 평화, 통일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 **9**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II 김대중 정부에서의 민간단체 여성평화 통일운동의 평가와 발전방향 ---------- **39**
정현백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참가자 (가나다순)

성 명	단체 및 지위
강 남 식	한국여성연구소소장
김 경 미	대전대 정치외교학 강사
김 경 애	한겨레신문 기자
김 미 경	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 승 국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의장
김 정 수	성공회대 평화윤리교육 박사과정
김 효 선	비즈우먼 사장
남 승 희	명지전문대학교 사회교육 교수
노 귀 남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박 수 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 팀장
박 현 선	고려대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서 미 숙	한국장로교여성협의회 회장
손 미 희	통일연대 여성부위원장
양 영 미	참여연대 정책실 간사
이 금 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 명 희	상지대학교 강사
이 정 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이 혜 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임 순 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임 희 숙	한신대학교 강사
전 은 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정 강 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정 경 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조 영 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복지실장
최 성 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직국장
* 사무국	
김 현 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부장
전 은 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국장

<기조발제 1>

김대중 정부 평화, 통일정책 평가와 발전방향

김 민 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해방이후 38선이 고착되면서 남북에 이데올로기가 다른 정부가 각각 수립되었고 곧 이어 1950년에 한반도에 남북한 간에 전쟁이 발발하고 휴전하면서 남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대북 및 통일정책이 되었다. 남한 정부는 역대 정권들의 대북관 및 국내, 국외적 요인에 따라 시기적으로 사뭇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으로부터 시작하여 현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북정책이 있어왔고 이에 대한 많은 평가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얼마나 통일에 기여해왔고 통일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기준으로부터 효용성, 즉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등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북 정책에 대한 기존의 많은 평가 가운데 유독 여성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대북정책을 평가하되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하고자한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국내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고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우호적 행위를 이끌어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올해말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기준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도 도출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여성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평가해야하는 이유는 남북한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단과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며, 또한 앞으로 있을 통일이후의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행위자는 여성이어야한다는 분단과 통일 그리고 평화에 있어서 여성의 입장을 생각할 때 대북정책은 여성의 삶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안보 문제, 군사문제는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영역으로 공히 성적인 분리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말하자면 '무성적인' 분야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특별히 여성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여성의 시각에서 대북포용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북포용정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먼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대북포용정책을 평가하면서 바람직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 대북정책을 여성의 시각에서 평가해야 하는 이유

그간의 여성운동은 통일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 여러 여성단체들이 남북한 여성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추진해왔으며 북한 탈북여성들의 남한 정착과 관련된 문제에도 여성단체들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전 국민의 절반이 여성임을 생각할 때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은 전체 여성 인구 가운데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대북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1) 통일이라는 정치변동과 여성

첫째 여성은 통일과 같은 사회적 변동, 정치변동에 있어서 사회의 어느 다른 집단보다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극심한 정치적 변동은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정이 야기된다.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몇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는 국가안보이다. 다른 정치권력 혹은 다른 국가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고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과거 20세기 이전과는 달리 국가의 패망이 지도상에서 그 국가가 지워지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도상에는 국가

의 이름을 가지고 국제적으로도 외형상 하나의 행위자로 활동하더라도 자주성을 상실하여 특히 외교정책에 있어서 타국가에 의존한다면 그 국가의 안보가 유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의 목표는 경제적 부 또는 흔히 사용되는 용어로 경제성장과 발전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로서 존재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국가 부의 축적을 계획하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은 더 이상 논의의 필요를 느끼지 않지만 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통일의 당위성이 되고 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안보가 유지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내적으로 안정되게 정치체제가 유지되며 정치권력이 원활히 통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가지의 목표를 생각할 때 첫 번째의 목표인 국가의 안보문제는 통일과 더불어 중요한 대치세력이 해소됨을 의미함으로 진일보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제성장의 목표와 정치적인 질서와 안정의 목표에서는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 경제성장의 경우 독일의 경우를 보면 통일이후의 경제상황에 대해 짐작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통일이후에는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경제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고용정책 및 여성에 대한 복지혜택, 그리고 모성보호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특히 상당히 제한된 북한의 노동시장이 남한에 개방됨으로써 남한의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여성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통일 독일의 경우에서 좋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1989년 통일이전 동독의 여성경제활동인구(15세부터 65세까지)의 취업률은 78.1%이었는데 이에 교육중이거나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여성까지 포함시키면 취업률은 91.3%에 이르렀다. 체제전환이후 동독 총실업자 가운데 여성이 54.8%에 이르렀고 1992년에는 전체 실직자의 2/3가 여성이었다가 1995년에는 63.7%로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동독 지역의 실업이 증가하였지만 여성노동자에 있어서 실업은 더욱 극심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복희 2000, 191). 결국 통일과 같은 급진적 정치변동상황은 국가의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며 이 변화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는 것으로 보아 한반도의 통일 역시 북한 지역 여성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밀려나는 것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탁아소가 자본주의적 영리경영으로 전환되면서 탁아비가 엄청나게 올랐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일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기인하기도 한다. 김경미(2001, 292)는 이에 대해 서독의 성차별적인 정치적 및 경제적 정책결정구조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통일이후 통독 정부는 서독의 정책결정과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통일이전의 서독 정책결정과정은 속성은 성차별적이며 남성중심적인 정책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통일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여성관련 많은 정책결정들은 여성의 입장 및 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 상당수의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라는 부담 때문에 직장에서 밀려난다고 생각하여 동독지역 여성들이 임신을 기피하자 통독정부에서는 탁아의무제도 및 몇 가지 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였지만 동독 여성들은 과거와 같은 상황을 가질 수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이라는 정치변동은 경제적인 악화와 연결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성차별적 정책결정구조를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면서 여성의 소외가 나타나고 여성은 기존의 혜택을 잃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안정과 질서유지인데 극심한 정치변동의 경우 모든 국가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목표로 정책을 수행한다. 국가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가족주의와 같은 보수주의이데올로기로 지배구조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은 중요한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족은 현재 정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정권의 권위를 수용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방법을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랜달 2000, 238). 그래서 정치변동시에는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가족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97년 IMF 위기시에 국가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였다. "남편 기살리기"등의 운동을 통하여 사회에서 남성중심으로의 재편을 꾀하면서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를 남성으로 대표되는 가족으로 상정하였다. 동독의 경우에는 통일이전에는 가족과 직업의 조화가 여성들에게 양립할 수 없는 양자택일적인 가치가 아니었지만 통일이후의 여성들은 시간제 노동의 어려움 속에서 가정과 직업 가운데에서 택해야하는 입장

에 놓이게 되었다(전복희 2000, 195). 1997년 이후 한국에서도 구조조정단계에 들어간 많은 기업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이유로 여성이 우선적으로 해고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부가 한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여성이 사표를 쓰도록 암묵적으로 강요되었는데 이런 상황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국가의 가족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지역의 여성들이 통일의 '잃은자'(김경미 2001)가 되었지만 반면 서독여성들의 지위는 통일로 인하여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탁아제도등에 있어서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통일이 남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힘들다. 1997년 IMF관리체제와 더불어 보았듯이 '남성=생계부양자'라는 이데올로기가 훨씬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국에서는 통일이 되거나 남북 경제교류가 더 활성화되면서 남한 여성의 경우 일자리를 두고 북한 남성노동력과 경쟁하게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데 특히 여성의 삶에는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통일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게 될 여성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 여성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은 일차적으로 통일의 방법을 모색하고 이차적으로 통일이후의 새로운 질서의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북정책은 바람직한 질서의 모색과 관련이 있다. 현재 남한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부 및 여성단체들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일정비율의 여성을 할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30% 할당을 선거법에 명시하였지만 강제이행의무조항이 없어서 지난 16대 총선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가 이미 제도화되어있고 남성중심적인 정치로 고정되어 있어서 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과 통일이후의 한국의 정치질서는 새로 형성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고정된 현재의 정치를 바꾸는 것

보다는 용이해 보인다.

그러나 통일을 이룩한 국가들에 관한 비교연구를 보면 독일, 예멘, 베트남에서 모두 여성의 지위는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락되었다(백영옥 외 1998). 그 이유는 우선 통일이라는 정치변동에 따르는 사회의 보수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서인 통일이 전개되는 과정에 여성들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들 분단국가들의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통일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단지 통일로 만들어진 질서속에서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이들 분단국가의 여성들의 지위는 하락하였고 통일이전에 누렸던 다양한 복지정책도 상당히 후퇴하였다. 이런 점에서 여성들이 대북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과정 및 통일정책전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성차별적인 정책결정과정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다 보니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성차별적인 정책결정의 성격도 현재적 이유에서 지양되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전환이라는 점에서도 현재의 성차별적인 정책결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3) 국가안보에 대한 여성적 관점

세 번째로 여성이 대북정책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는 여성이 생각하는 국가안보와 남성이 생각하는 국가안보는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북한 문제, 안보문제, 군사문제는 남성의 영역으로서 여성과는 무관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몇몇의 페미니스트 국제정치학자 중심으로 안보를 여성의 시각으로 재정의하기 시작하였다(티크너 2001). 기존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안보를 군사적이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여 적대적인 국제환경의 위험에 대항하여 국경과 국가의 통합성, 그리고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안보를 정의한다(Waltz 1979). 이 개념 속에는 국가란 단일하고 통합된 행위자로서 안보에 대한 유일한 담보자로서 등장한다. 최근에는 안보의 개념을 좀더 확대하여 경제 및 문화, 환경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이 등장하였지만 왈츠류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안보의 협의적 의미를 여전히 강조한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의 시각에서 안보를 재정의하면서, 안보를 모든 폭력의 감소라고 정의하고 여기에 육체적, 구조적, 환경적 폭력을 모두 포함시킨다

(Tickner 1997, 624). 안보는 여성이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위자로서 행동해나가는 과정이지 이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를 논의할 때 국가안보보다는 개인의 안보 및 공동체의 안보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따라서 실제로 기존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안보가 보장된 상태'로 인식한 어떤 상태가 있더라도 여성들에게 그것은 '안보가 보장된 상황'이 아닐 수 있으며 그 상황이 오히려 구조적으로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군대의 확장 및 군비확대는 기존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보기에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잘 완비된 군대와 무기로 무장된 상태는 안보가 보장된 상태일 수 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의 안보개념에서 보면 그것은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고 구조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군대의 확장 및 군비확대는 군사주의를 사회의 저변까지 확대하며 집단적 폭력은 정당화된다. 더 나아가 군사주의는 나의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고 그 다른 집단을 적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상황을 야기시킨다. 민족국가단위의 단결은 군사주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김인숙 2000, 141). 이 때문에 상대국가와의 적대적인 감정은 고조되어 더욱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

군대확장과 군비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인가운데 하나는 군인이다. 군인들이 늘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투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기대되는 군인의 자질은 군대에서 요구하는 남성성의 근간을 이루며 군사화된 사회의 남성성의 기준이 된다(Enloe 1991). 군대는 거칠고 주도적이고 공격적이며 경쟁적이고 객관적이며 지배하려 들고 성취하려 하며 감정적인 것을 배제한다. 이것은 군인들에게 남성상을 요구하고 그래서 군사화된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 남성적인 것이 우월한 가치를 이룬다. 이런 상황속에서 여성적인 것은 안보를 위협하며 안보를 위한 바람직한 인간상으로서 군인과 같은 남성상을 제시하여 사회에서의 군사주의를 더욱 확대한다. 여성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며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개인의 불안전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구조적 불평등은 이를 기초로 확대될 수 있다(Tickner 1997, 624).

또한 안보의 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은 권력과 군사력을 종래의 국제관계학자들과는 다르게 정의한다. 기존의 국제정치

학자들의 경우, 국가는 안보의 제공자로서 국가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균형적으로 안보를 제공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는데 페미니스트들은 국가가 오히려 개인 특히 여성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페미니스트들에게 국가는 군대를 통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며 현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여 특정한 가치에 비대칭적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 인식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즉 구조적 불평등의 생산자가 된다. 구조적 불평등은 안보를 해치는 요인이 되므로 국가는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안보에 있어서 심각한 위해자가 될 수 있다.

안보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을 분석할 때 페미니스트들은 전쟁의 원인보다는 전쟁의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했으며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말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진다. 시민들과 군대간의 갈등의 부정적인 충격에 관심을 둔다. UN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전쟁에서 민간인의 사상비율이 20세기 초엽의 10%에서 현재는 90%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민간인의 사상비율을 성별로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인중에서 여성은 아마도 최악의 피해자일 것이다. 세계의 정규군 가운데 여성은 단지 2%에 지나지 않는다. 엄마로서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는 제공자로서, 보살피는 사람으로서 여성은 특별히 군사적 충돌과 관련된 경제적 제재에서 가장 심한 피해자가 된다. 예를 들어 걸프전이후의 이라크에 대한 UN의 금수조치에 의해서 이라크 여성이 겪는 피해와 같은 것이다. 군사적인 갈등으로 생긴 난민 중 여성과 어린이는 전체 난민의 80%이며 1970년과 1994년사이에 3백만에서 2700만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Tickner 1997, 625).

페미니스트들은 전쟁중의 강간문제에도 관심을 가진다. 보스니아내전을 보면 강간은 전쟁중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사건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군대의 체계적인 전술이다. 인로는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주변에서 종종 여성이 납치되고 매춘으로 팔려가는 일이 나타나는 사회적 구조를 묘사하면서 전쟁 및 군대와 여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Enloe 1991).

페미니스트들은 안보에 대해서 쓰면서 경제적인 차원과 구조적 폭력 문제를 다룬다.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만큼 잘 사는 나라는 없다. 국가

사이에 편차가 존재하지만 평균적으로 여성의 수입은 남성의 수입의 3/4이다. 오늘날 절대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인구는 13억인데 이 중 70%가 여성이다. 절대적 빈곤상태에 살고 있는 농촌의 여성수는 과거 10년 사이에 50%가까이 증가하였다. 은행의 이자수혜자들 가운데에서도 여성은 적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여성이 은행의 대부수혜자가운데 7-11%밖에 되지 않는다(Tickner 1997, 625). 현실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그들의 노동은 더 적은 임금밖에 못받고 있으며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노동이 대부분 시장경제의 밖에서 가사나 생계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사이의 불균형은 모든 불안전과 관련이 있는데 가계로부터 지구적 경제까지로 확대되는 가부장적 구조에 의해서 형성되는 체계의 구도내에서만이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본성에 있어서 더 평화적이기 때문에 여성을 원한다든지 혹은 여성은 육체적 힘에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물리적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본질주의적으로 안보와 여성의 문제를 접근하는 시각보다는 현실적으로 안보가 여성에게 어떻게 민감한 지를 설명하는 이와 같은 설명방식은 여성이 안보영역에 참여하며 주요 정책결정자가 되어야하는 이유를 보다 설득력있게 전개한다. 한국의 대북문제는 안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문제 그래서 특별히 반여성적이지도 않지만 친여성적이지 않은,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여성의 참여가 이상하리만치 철저하게 배제되어 온 영역이다. 사회의 군사주의화와 더불어 군대가 여성에게 배타적이고 군사영역이 여성의 참여를 근원적으로 배제해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이 더 평화적이어서가 아니라 안보 및 물리적 충돌, 군사적 갈등은 여성의 삶에 심각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하며 국가는 안보에 의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여성들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성의 시각과 입장을 대북정책에 반영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중립적이라는 언명은 단순히 자기변명 혹은 정당화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반여성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가지 면에서 볼 때 대북문제는 여성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여성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이후의 대북포용정책을 평가하면서 여성의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려한다. 즉 대북포용정책의 전개과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주체가 되어 참석해왔는지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많은 분단국의 통일과정에 여성이 주체로 참여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통일이후의 질서에서 여성이 소외되었던 원인임을 생각하면(백영옥 외 1998), 이 점은 통일이후의 새로운 질서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두 번째는 교류 및 다양한 남북 접촉에 있어서 여성은 얼마나 기여해왔고 정부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해 왔는지 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남북정상회담이후의 대북포용정책은 평화의 구조화, 군축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비군사적 관계의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하는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은 6·15 남북정상회담이후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6·15 남북정상회담이후의 대북포용정책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책에 토대를 두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이것은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화해협력구도로 전환하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겠다는 의도이다. 동시에 대북정책 3원칙으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 협력의 적극적 추진 등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역시 이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남한이 취한 일련의 일방적인 선제조치에 대한 상호적 대응으로서 북한은 남한의 정상회담제의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박재민 2002). 이런 점에서 6·15 남북정상회담은 대북포용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이면서 대북포용정책의 한 추진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1)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지난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상면했다는 역사적 의미로부터 출발하여 실질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정책결정자간의 합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윤덕희 2000, 241). 특히 1994년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간에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가 무산되었을 때와는 달리, 남북정상회담은 제3자의 개입이나 중재 없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교섭을 통해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www.unikorea.go.kr).

이어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이 각각 상대방을 정치적 실체와 대화상대자로서 그 위상을 인정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정운영 능력과 합리성을 지적하고 협상 상대자로 인정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가원수의 영접시 제공하는 의전절차로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함으로써 남한을 정치적으로 인정하였다(중앙일보 2000·06-15일자). 이를 통해서 한반도문제를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커다란 의의라 하겠다. 동서독의 예에서 보듯이, 분단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분단 현실의 인정, 즉 상호 체제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양측이 상대방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함으로써 대화의 진전 및 상호간의 교류가 서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체제의 붕괴에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반함으로써 의미있는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이후의 대북관계에서는 화해협력이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경협을 비롯한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이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되면서 남북 당국간 관계가 정상화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지난 7월 첫 회담이 개최된 이후 정례화되어 정치·군사·경제·인도 등 남북관계 전반을 이끌

어갈 중심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남북간 현안을 협의·해결하는 것은 물론, 국방장관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국간 대화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남북연락사무소의 업무도 재개시켰다. 남북국방장관회담은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이루어졌지만 이후 아직까지 2차 회담은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은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첨예한 군사적 대치의 완화와 정치·군사적 부분의 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길병옥 2002, 8).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은 우선 민간인들의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데 따르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쟁위험제거를 위해서 노력하고 비무장지대안의 왕래 허가와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합의하였다. 실질적인 이행사항수준으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www.unikorea.go.kr).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도 출범하여 실무접촉을 거쳐 1차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 절차 등 4개 합의서가 타결되어 경협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후 전력 문제,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회의 등 사안별 경제회의가 개최되므로 남북간의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정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각종 회담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 차례의 특사접촉(3.17~4.8, 중국)과 다섯 차례의 남북준비접촉(4.22~5.18, 판문점), 통신·보도 실무접촉, 의전·경호 실무접촉,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포함하면, 2000년 한 해 동안 남북사이에는 총 25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는 지난 한 해동안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이 단 두 차례 개최된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이며, 회담도 다양화·정례화된 것이다.

(2) 교류의 확대

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간의 교류는 확대되었다. 남북 교류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부터 시작하여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는

데 남북정상회담이후에는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위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을 통해서 대북경협추진에 필요한 기업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출비율, 대출조건등을 정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류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물적 기반의 확대를 위하여 재원조성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련이 없이는 실질적인 교류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남북협력사업 예산은 개별부처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남북협력기금에 일괄 계상할 것이며 남북협력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기금에서 지원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의 남북간 왕래, 문화·예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융자 및 지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을 확대 마련하였다[1]. 남북정상회담이후 마련된 협력기금규모보다 더 한층 확대된 형태로 조성되어 2002년 3월 현재 총액이 2조 3191억원이 조성되었다. 아래 표에서 보면 1998년에 들어서면서 저조하였던 협력기금은 1999년 늘기 시작하다가 2000년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가지고 2000년에는 경수로 본공사 착공에 따른 경수로사업과 북한에 대한 식량차관 제공을 위해 4132억원이 대출되었고 비료 지원과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및 평양교예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공연 지원, 그리고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지원등을 위해 총 1543억원이 지출되었다. 2001년에는 KEDO 경수로 사업과 식량차관(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 및 경협 추진기업에 대한 경협자금과 교역자금을 위한 대출금으로 3653억원이 지출되었고 비료지원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제2, 3차 남북이산가족 교환방문사업, 대북지원 민간단체 지원사업,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사업등

1)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1991년 3월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의 경비로 2287억원이 사용되었다(임강택 2002, 10-11).

<표1>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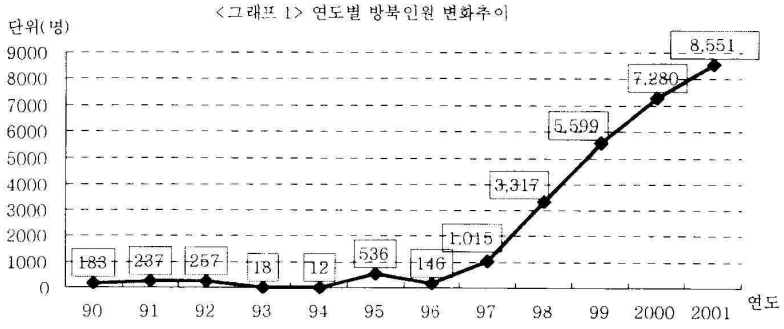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	민간출연	운용수익	공공자금 예수금	계
1991	25,000	-	237	-	25,237
1992	40,000	-	5,118	-	45,118
1993	40,000	3	4,778	-	44,781
1994	40,000	1	9,386	-	49,387
1995	240,000	119	14,589	-	254,708
1996	100,000	132	18,410	-	118,542
1997	50,000	288	27,873	-	78,161
1998	-	-	40,280	-	40,280
1999	-	3	23,013	149,831	172,847
2000	100,000	541	30,118	254,852	385,786
2001	500,000	1,080	29,406	310,000	840,486
계	1,135,000	2,167	203,104	714,683	2,055,335

출처 : 통일부,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02), p.175

협력기금의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교류 사업이 진행되었다. 인적 교류가 특별히 증가하여 1990년에 연간 183명이 방북하였던데 비해 2000년에는 7280명으로 거의 30배이상이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도 방북인원이 8551명으로 상당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통일부 2002).

<그래프 1> 연도별 방북인원 변화추이



출처 : 통일부, 『통일백서』(2002) p.46

한편 경제적 협력분야에서는 대북포용정책이 실시되는 초기에 비해서보다는 덜 활발하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실적이 빈약한 편인데 그것은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 중 현재 진척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몇 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

대북포용정책이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인적교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이후에는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다. 작년 9·11테러사건과 미국의 '악의 축' 발언으로 약간 경직되긴 하였지만 남북간 주민은 1998년이후 접촉,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나가고 있다. 경제협력분야에 있어서도 거래성 교역부분에서

2) 예를 들어 녹십자는 2000년 9월에 준공한 혈전증 치료제 생산공장에서 반제품 시험생산을 거쳐 2001년 반제품을 최초로 반입하였다. 조선련봉총회사와 합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화자동차는 2002년 3월 남포 현지에서 자동차 수리 및 개조를 위한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은 이탈리아 피아트 자동차를 조립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3단계에 걸쳐서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중국 북경에서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와 공동으로 '삼성-조선컴퓨터'소프트웨어 공동협력개발센터를 열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품종 옥수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담배 임가공사업도 한국담배인삼공사와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 개성공단 건설사업과 경의선 도로 및 철도 연결사업은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성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통일부 홈페이지/주요업무현황/교류협력).

는 별성과는 없지만 비거래성 부분은 확대되고 있어서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식량 및 비료 지원과 농업구조 개선사업지원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협력은 남북정상회담이후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주변적 변수(미국의 대북정책)와 남북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3) 이산가족 상봉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분단 반세기의 가장 큰 피해자집단인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네 차례 방문단이 교환되었고 4478명의 이산가족들이 북과 남에 가족을 방문하여 상봉하였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1985년 이후 15년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11만 4000명[3] 가운데 4478명이 50년 넘게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표2> 이산가족 상봉

	기간	상봉인원수
1차	2000. 8. 15 ~ 18	1170여명
2차	2000. 11. 30 ~ 12. 2	1220여명
3차	2001. 2. 16 ~ 18	1240여명
4차	2002. 4. 28 ~ 5. 3	848명
합계		4,478여명

출처 : 중앙일보 2002년 5월 4일자

4천여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고 상봉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아졌지만 상봉신청자의 연령이 상당히 고령층이고 그들의 상봉희망이 간절하다는

3) 이 가운데 6142명은 생존이 확인되었고 4071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통일부, 2001). 이 인원은 신청자 가운데 10%에 지나지 않는다.

점을 상기하면 상봉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재의 상봉수준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좀더 정례적인 상봉이 이루어져야하며 면회소 등의 설치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제 3국을 통한 상봉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북한의 변화

대북포용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선 통일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으로서 남북한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정치적 교류를 먼저 이루고 이 분야에서의 통합을 통하여 정치적 분야에서의 협력도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접근이며(김도태 2002 참조) 두 번째로는 햇볕정책으로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호적인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우호적인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박재민 2002 참조).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은 결국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가 결국 정치적 교류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다른 예측으로부터, 그리고 남한의 우호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기대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화하고 있고 남한과의 정치적 교류 제의에도 동의하였으며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속도와 폭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변화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우선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한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에 협조해 오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중국을 방문, 중국의 지도자들과 중국식 개혁·개방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가 하면, 간부들을 해외에 파견하여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연수케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중앙일보 2000 05-31). 최근에는 경의선복원공사가 시작되면서 남북한 화해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신의주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면서 북한 개방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높였다.

국제무대에서도 북한은 남한과 협력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보여주여 한반도의 통일 및 화해에 전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

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Korea" 이름으로 공동 입장하였고 이번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같은 형태로 입장하였고 북한은 응원단까지 파견하면서 아시안게임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는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고 북한은 대외관계 및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런 북한의 태도는 주변 강대국 예를 들어 미국의 대북정책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작년의 미국 테러사태이후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북한의 개방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변화된 북한의 태도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공고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외적으로도 '철천지 원수'라고 하던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유럽연합(EU)의 국가들과도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서방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시찰과 학습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2000년 7월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2001년 새해에 들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 새로운 사고와 방식을 강조하는가 하면, 중국의 대표적 특구인 상해시를 방문하는 등 개방과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와는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해 방문 내용 등을 북한 보도매체가 대내적으로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의심케 하는 중요한 변수가 최근 등장하였다. 그것은 북한이 그동안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10월 초 미국 대북 특사 켈리차관보에게 핵개발을 시인함으로써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래 북한이 대외적으로 보여준 많은 화해 정책을 사실상 제스쳐였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 현금지원을 차단해야 하며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면 현물 즉 쌀이나 비료와 같은 형태로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시인이 나온 시점이 중요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즉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시점이 한국에서 차기 대선을 앞둔 시점이며 현재 대북포용정책론자인 노무현 민주당후보의 지지율이 당선권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시점이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정책을 취하고 있는 시점이다. 차기 대선은 노무현이외의 어느 당선자라도 현 정권과 같은 햇볕정책식의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경제지원받을 수 있고 미국과 대화의 창구를 지속할 수 있는 초강경정책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3. 여성의 시각에서 본 대북포용정책

우선 대북포용정책과 더불어 여성이 대북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참여해왔는지를 살펴보자. 통일정책의 결정에는 통일부등의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통일고문회의, 통일정책자문회의,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통일문제와 대북정책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통일정책관련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1999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표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통일부는 통일정책에 대한 평가위원을 임명하고 자체적으로 통일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총 13명의 위원가운데 여성위원은 2명으로서 다른 위원회의 비율에는 못미치고 있다(통일부 2002, 12). 이외에도 통일교육자문위원, 민주평통위원등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의 공식수행원 24명 가운데 여성은 1명에 불과했으며 남북정상회담이전 통일관련위원회의 여성비율은 10%내외로 상당히 저조하였기 때문에 여성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참여비율을 최소한 30%까지 늘려 줄 것을 요구하여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점진적으로 대북정책 결정과정 및 평가 과정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3> 통일정책관련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여성위원(A)/위원총수(B)	비율(A/B)	여성위원(A)/위원총수(B)	비율(A/B)	여성위원(A)/위원총수(B)	비율(A/B)
통일고문회의	6/29	20.0%	7/29	25.0%	7/27	25.9%
통일정책자문회의	4/48	8.3%	12/48	25.0%	15/48	31.3%
통일교육심의위원회	3/25	12.0%	3/24	12.5%	4/14	28.6%
자체평가위원회	-	-	-	-	4/10	40.0%

출처 : 여성부, 『여성백서』 (2002) p.341

두 번째 남북 교류에 있어서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문제이다.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대북포용정책의 실시이후, 혹은 남북정상회담이후에 특별히 남북한 여성교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199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산하에 <우리민족서로돕기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활발하게 대북지원활동을 벌였고 1998년에는 범국민적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이 협의회에 여성상임의장과 공동의장 및 정책위원장에 여성이 선출되었다. 그 하위 분과로 24개 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논의와 남북교류에 여성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많은 민간단체들이 통일운동 및 통일논의에 참여하여서 1999년 8월에는 '겨레손잡기 대회'에 참여하고 '여성 8·15선언'을 결의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2000년에 들어오면서 남북한 여성교류는 확대되어 총 6건의 교류를 성사시켰다. 일본군위안부문제등 남북한 여성 공동의 관심사 중심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기도하고 또한 남북여성교류 확대를 위한 접촉도 있었다. 2001년에는 모두 3건의 남북 여성교류가 성사되었다.

<표4> 남북한 여성교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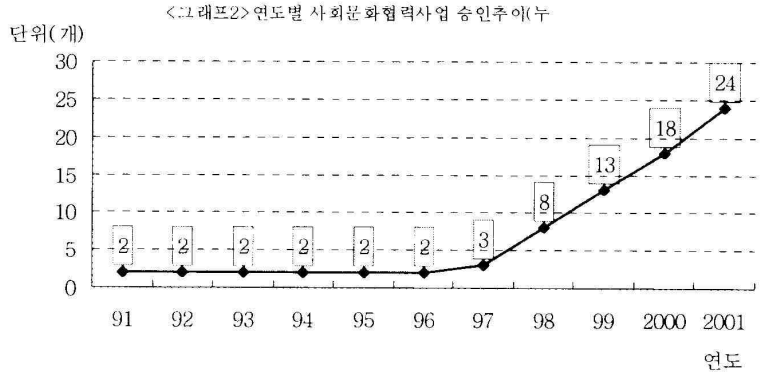
일 시	장 소	추진주체	북측 상대자	내 용
1991.1	동경	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등 3명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3명	제1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1991.11	서울	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등 3명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15명 방남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가부장제 문화와 여성, 통일과 여성, 평화 와 여성'
1992.9	평양	이효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등 30명 방북	여연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민족대단결과 여성의 역할,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전후책임,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일 시	장 소	추진주체	북측 상대자	내 용
1993.4	동경	이우정(국회의원)등 11명	여연구(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 13명	제4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책임· 전후보상, 아세아 평화,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993.10	동경	정신대문제협의회	북한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제2차 종군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 참가
1993.11	평양	정대협(이효재 등 2명)	종태위 관계자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참가
1998.7	동경	정대협(정진성 등 4명)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홍상진 등)	일본의 전시하의 강제연행에 관한 동경심포지움 참가
1998.10	북경	정대협(윤정옥 등 6명)	종태위(부위원장 박명옥 등 8명)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일본 여성의 3자회합
1999.9	평양	우리민족서로돕기(이김녀 등 6명)	조선여성협회(홍선옥 등 3명)	남북여성교류 협의
2000.3	상해	정대협(정진성 등 10명)	종태위(박명옥 등 3명)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상해 국제심포지움 참가
2000.6	평양	이희호여사 등 여성계 대표	여원구 등 북측 여성계 대표	북측 여성계 대표 접촉
2000.7	필리핀	정대협(윤정옥 등 7명)	종태위(황호남서기, 정남영 등 4명)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 마닐라국제실행위원회 및 국제검사단 모임 참가
2000.10	평양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명)	조선여성협회	노동당기념행사 참관차 방북시 접촉
2000.12	연변	장필화 등 10명	김일성종합대학(궁영숙 교수 등 4명)	남북한 및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관련 학술회의
2000.12	동경	정대협(윤정옥 등 150명)	종태위(홍선옥 대표, 정남영, 황호남 등 11명)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 일본천황 공동 기소
2001.2	평양	한국여성지도자연합(김윤덕 등 10명)	조선여성협회(홍선옥 등 2명)	「남북여성 하나되기 토론회」 개최
2001.8	평양	민화협, 통일연대 여성위원회(이효재 등22명)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협회 관계자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여성통일토론회
2001.9	캐나다	이우정(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7명	홍선옥(조선여성협회)등 5명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연대하는 여성들 회의 참가

출처 : 여성부, 『여성백서』 p.344

남북한 여성교류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여성 특유의 문제와 더불어 통일 및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같은 좀더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남북 여성간의 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교류를 진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4].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진행된 남북교류 속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약하며 여성의 목소리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미미한 의미밖에 가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래프2> 연도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추이(누



출처 : 통일부, 『통일백서』 2002, p.91

전체 누계에서도 여성분야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여성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도 여성의 목소리는 별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2002년 발간된 『통일백서』에서는 사회문화분야의 남북한 교류에 대하여 성격별로

4) 북한과 직접 혹은 간접의 접촉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 남한 내에는 다양한 여성평화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과다한 방위비 지출로 인하여 여성의 복지 비용 및 교육비 지출이 저하되고 있다고 인식한 여성들은 '방위비 삭감 캠페인'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1천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94년에는 여성단체연합 등 9개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여성모임'을 결성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격렬히 비판하고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1998년에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중심으로 '군축운동의 해'로 1998년을 정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이탈 여성주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여성의 입장에서 한반도 안보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정현백 2000 참조)

항목을 나누어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분야, 학술분야, 체육분야 등의 성격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지만 여성분야의 교류는 따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어디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교류 빈도에 있어서도 경제교류 및 다른 사회문화전반의 교류에 비해서 훨씬 적지만 정부에서 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다루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군축 및 한반도의 평화논의에 있어서 국민 중 어느 누구보다도 직접적인 당사자일수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의 교류 및 화해진전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진작해야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세 번째 대북포용정책이 추구하는 질서를 여성의 시각에서 평가해보자. 대북포용정책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평화·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한반도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일방적 흡수통일의 배제, 남북한 화해 협력의 적극적 추진의 3원칙에 입각한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비증강에 힘씀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미국과의 동맹의 틀을 강화하여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해 억제력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화를 통하여 화해하며 대화가 가능하도록 북한과 신뢰를 쌓으려는 것이 정책의 근본 관심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과거 한반도를 지배하였던 군비증강 및 동맹강화를 통한 억제력의 증강 정책에 비하여 한반도 평화에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우선적인 우호정책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우호적인 반응을 가져왔고 또한 우호적인 반응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할 때(박재민 2002 참고) 전쟁의 상황과 한반도의 긴장이 여성들에 특별히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북포용정책은 여성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였고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도록 했다면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오히려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선택이었으며 2차대전이전 영국 애버딘 내각의 대독 유화정책이 오히려 독일의 침략성향에 대해 강경대응하지 않

음으로써 독일의 팽창확대에 일말의 책임을 졌던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대북포용정책은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장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미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대응을 보면서 상황의 전개를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4. 결론-요약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상으로 세가지 점에서 대북포용정책을 평가해보았다. 여성이 대북정책결정과정에 얼마나 참여해왔으며 정부는 참여를 진작해왔는가 하는 점에서 통일정책자문기구에 1997년이전 10%에 머물렀던 여성의 참여는 2002년 현재 30%에 이름으로써 상당한 증가를 이루었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남북한 교류에서 여성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해왔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 근년에 들어서 여성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삶과 국가의 안보가 직결되어 있음에 대해서 의식이 눈떠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여성들이 남북교류에 참여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문제에 실질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북포용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평화와 화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안보적 입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북핵개발과 관련하여 이 문제에 있어서의 결론적인 판단은 유보해두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대북포용정책은 이전의 대북정책에 비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진일보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우선 통일정책이나 통일운동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더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30%가 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위원의 30%가 되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여성참여가 비율상 증대된다고 하여도 개선될 점은 여전하다. 위원의 임명이 개별적인 연줄망을 통해서 통일 관련위원회에 참여한 여성의 경우 그들의 활동이 여성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거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향후의 교류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충원의 선발기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의 독일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오늘날의 사회 각 분야의 전개의 중심에는 정치가 놓여 있으며 자원의 배분, 중요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 배분 방식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므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대북정책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증진도 중요하지만 정책결정분야 전반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증진이 제고되어야지만 이런 논의가 실현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남북한 여성교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보았듯이 정부에서는 남북한 여성교류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지원도 많지않다. 민간교류는 주로 남성간의 교류 혹은 경제교류, 그리고 기득권층의 교류 등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와서 남성과 같은 경제력을 지니지 못한 여성들의 경우 남북교류에 있어서 매우 제한된 기회밖에 가지지 못하고 있다. 남북분단상황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정부는 남북한 여성교류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통일 혹은 평화공존체제에서도 역시 여성은 여전히 소외된 채로 남게 될 것이며 극단적으로는 여성이 통일고 인해서 더욱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제교류의 경우 여성경제인의 교류에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거나 여성경제인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대북포용정책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여성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인 여성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제까지 남북한 여성교류를 보면 교류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진지한 자각과 의식에서라기보다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대해서 알자는 막연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전복희외 2000, 50). 그래서 성사가능성도 낮아서 남한정부에서 승인한 경우에도 북한의 상대편이 응답하지 않아 무산된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 여성교류가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의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체적이며 장기

적인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우선적이면서 선행되어야 할 교류에서 출발하여 점점 심도를 더해가는 교류협력으로 나아가서 남북한의 화해에 일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는데 기여하는 여성교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갈퉁은 평화를 정의하면서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개념을 넘어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는 상태, 즉 적극적 평화를 주장했다(갈퉁 2000). 그는 평화는 직접적, 물리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 등과 같은 간접적, 구조적 폭력까지 극복된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직접적 폭력은 행위자와 피해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간접적 폭력은 사회구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를 의미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따라서 현재에 존재하는 폭력에 대한 평화적 제거방안도 논의되어야하지만 폭력의 제거이후의 세상, 즉 통일이후의 세상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빈공간에 더 가공할 폭력의 세상이 들어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평화논의는 적극적 평화개념에 기초한 통일이후에 대한 청사진부터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길병옥, "햇볕정책, 정치·군사분야에서의 성과와 과제"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5차 정책포럼 『햇볕정책의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2002. 5

김경미, "독일통일과 구동독지역의 여성: 왜 구동독지역의 여성들은 "통일의 잃은 자"가 되었는가?" 『국제정치논총』 2001년 제 41집 1호

김도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본 햇볕정책의 평가와 남북관계"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5차 정책포럼 『햇볕정책의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2002. 5

김민정외역, 비키 랜달 저, 『여성과 정치』 서울 : 풀빛, 2000

김원홍, "남북한여성 교류 활성화 방안" 『남북한 관계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주최 통일문제 특별학술회 자료집, 1997

김인숙,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과 평화』 서울: 당대, 2000

박재민, "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본 햇볕정책의 평가와 남북관계"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5차 정책포럼 『햇볕정책의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2002. 5

백영옥, 전복희, 서경교, 김민정, 송은희, 『통일대비 여성정책 연구』 정무장관 제2실 정책자료 1998

여성부, 『여성백서』 2002

요한 갈퉁, 강종일 외역,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들녘, 2000

윤덕희,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의미와 과제" 『여성과 평화』 서울: 당대, 2000

임강택, "햇볕정책, 경제·사회분야에서의 성과와 과제"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5차 정책포럼 『햇볕정책의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2002. 5

전복희, "1989년 이후 체제전환기 구동독 지역의 여성문제" 『국제정치논총』 2000년 제 40집 1호

전복희 외,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 동서독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자료 2000

정현백,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성의 요구와 역할" 『통일정세 공유 및 통일에 관한 입장마련을 위한 워크샵』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년

정현백, "한국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여성과 평화』 서울: 당대, 2000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 동향』 2002. 3

통일부, 『대북정책4년, 평화와 협력의 길』 2002

통일부, 『통일백서』 2002

황영주 역, 앤 티크너 저, 『여성과 국제정치』 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Enloe, Cynthia, *Bananas, Beaches and Bas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Molyneux, Maxine D., "State Policy and the Positioon of Women in South-Yemen" *Peuples méditerranés* n.12 juillet septembre 1995

Tickner, Anne, "You Jussst don't Understand: Troubled Engagements Between Feminists and IR Theoris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991:41

Waltz, K.,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www.unikorea.go.kr
www.moge.go.kr
www.acdpu.go.kr

중앙일보

여성평화통일운동, 현재와 미래[1)]

-김대중 정부 시기(1998-2002)를 중심으로

정 현 백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I. 평화통일운동의 조건변화

김대중 정부시대는 평화통일정책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분단과 군사주의 하에서 80년대 말부터 분출하기 시작한 통일운동은 반 외세, 민족자주를 그 핵심과제로 삼으면서, 그 방법도 매우 급진적이었다. '미제 타도'니 '주한미군 철수'니 하는 주장들이 거리낌없이 사용되었고, 북한의 원전들이 여과장치 없이 출간되었고, 분신이나 투신과 같은 극한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런 급진적 방법은 군부독재의 상황 하에서, 통일과 관련된 급진적 논의가 거의 금지되었던 상황 하에서, 통일에 대한 금기를 깨고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군부독재가 해소되고, 특히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행사에서 대한민국 수반의 자격으로 행동하였는데, 이는 북의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80년 대 통일운동이 고조되었을 당시, 중요한 쟁점의 하나는 통일방안 문제였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을 통해 양측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합의한 사실은 남북이 통일방안에서 공통점을 인정하고, 연합제 통일방안을 협의상대로 수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연방제를 지지하던 한국의 통일단체들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가야 하게 되었다. 통일운동도 한국 사회 내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시민성'을 획득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2)]

6·15 공동선언 이전에는 민간통일운동이 통일국면을 주도하였고, 더불어서 통일운동에 대한 독재정권의 탄압은 통일운동의 동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제 정

1) 이 원고는 아직 초고단계이므로, 필자의 허가 없이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 논문에서 필자의 사정으로 인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위시한 몇 개 단체의 활동이 제외되었으나, 추후에 보완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2) 서동만,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참여사회연구소·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 심포지엄,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자료집』, 2001. 4. 14, 24-5면

부가 통일논의를 과거처럼 봉쇄하지 않고 오히려 통일논의를 주도하고 있어서 통일운동의 활동공간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감이 없지 않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민간이 뒤따르는 형국이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약되었던 과거에는 민족민주운동이나 통일운동이 제공하는 '북한 바로알기운동'이나 자주적 교류의 시도는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이제 언론이나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고난의 행군' 이후의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지 시작하면서, 북한은 더 이상 국민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었다. 또한 북한체제에 대해 신뢰할 수 없고, 북한 경제가 불안정해서 통일의 경우 남한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너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국민은 정권의 강요보다는 다양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통일운동 진영이 친북적이지 않느냐는 의구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현실체제로서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토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것은 거의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른다. 결국 통일운동이 겪는 위기는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을 향한 설득력이 떨어진데 있고[3], 이제라도 통일운동은 새로운 정세 속에서 정확한 좌표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게 되었다.

통일운동은 과거와 같은 통일과 반통일의 이분법 구도에서 벗어나서 통일운동 내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동시에 정부 당국자의 역할과 민간운동의 역할을 구분하면서도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 않고, 양자가 보다 긍정적이고도 역동적 상호관계를 가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물론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정부에 의한 창구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된 정치 정세 속에서 한국이란 실체적 국가, 이를 대변하는 정부라는 매개가 설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말한 정부-비정부기구간의 역할 분업은 인정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대북 관련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민간부분의 역할이 경시된 감이 없지 않다. 분명 통일과정에서는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역할 모두가 필요한데, 정부 당국에 의해서도 사실 민간부문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한계점은 있지만, 90년대 후반기 이후 재야와 학생운동이 독점하고 있던 통일운동의 외연이 확장되고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북한동포 돕기, 북한 바로알기 등 다양한 운동에 참여하면서, 통일운동의 주체가 다원화되기에 이르렀다. 생활 속에 통일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운동방식도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을 선호하게 된 점도 달라진 점이다.

II.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조직적 발전

3) 김창수,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한국노총, 통일사업 실무책임자 교육발전 워크샵 자료집, 2001. 5. 28 - 29, 10면

앞에서 말한 대로 민간통일운동이 다원화되고 외연이 확장되었으면서도, 사실상 주도권을 정부에 빼앗긴데 비해, 여성의 통일운동은 양적 확대에 있어서나 질적 내용의 담보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은 첫째로 북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고, 그 참혹한 궁핍과 기아의 실상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들도 이 시점에서 북의 여성을 돕기 위한 활동에 착수해야 한다는 각성을 일어나도록 하였다. 둘째로,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남북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 개방적인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민 일반 뿐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였다. 셋째로, 1997년 3월 28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창립된 것은 여성평화통일운동의 본격적인 등장과 활동에 자극제역할을 하였다. 특히 여성들이 평화와 통일을 다루는 전문적인 단체를 조직하였다는 것은 운동에 동력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넷째로, 2000년 9월 11일 전대미문의 미국테러사건과 뒤이은 아프간 전쟁은 여성들에게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절실성에 대해 크게 각성하도록 해주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부시대통령이 북을 겨냥하여 내던진 '악의 축 국가' 발언은 한반도의 위기에 대한 여성들의 위기의식을 높여주었다. 다섯째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함께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북의 동포를 만나거나 북을 방문한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북에 대한 관심도 현저히 높아졌다.

또한 이미 김대중 정부 등장 이전부터, 1990면 독일통일과 더불어 여성이 내부식민지화되는 과정, 특히 옛 동독여성들의 열악한 현실이 알려지면서, 여성들은 통일과정에의 참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더불어서 어떻게 통일과정에 여성의 모습을 가시화하면서, 여성이 정책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었다. 그리 큰 영향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성부의 등장도 독자적으로 여성통일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원해줄 우군을 얻은 셈이었다.

이 글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김대중 정부시기의 여성평화통일운동에 대한 분석이므로, 먼저 여성통일운동의 조직적 발전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할 것 같다. 여성통일운동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 한 사실은 1997년 3월 28일 각계 여성 300여 명이 모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창립한 것이다. 1990년이래 남북여성통일운동을 주도하였던 이우정을 필두로 하여, 김윤옥·이김현숙이 참여하였고, 그 외에도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소속된 다양한 여성지도자 지은희, 신혜수, 정강자 등이 합류하여 여성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대변할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그 창립의 역사적 의미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첫째로 한국여성들의 통일 의지를 묶어내면서 동시에 이를 여성의 관점, 평화의 관점에서 발전시킬 사회행동의 장을 펼쳤다는 점, 둘째로 1991-3년에 열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를 계승하면서, 남북여성교류를 진척시킬 상시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

셋째로 여성의 평등한 참여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소외가 가장 심했던 통일·안보·국방 등의 분야에서, 처음으로 전문적인 여성단체가 출범하면서 여성들이 토론하고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열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4] 뿐 만 아니라 이 단체의 창립은 평화지도력과 여성평화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소속단체이기도 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통일운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보다 대중적인 운동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자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평화통일운동을 진행하였고, 이후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여성평화통일운동의 구심체역할을 하였다.

그 외에도 1998년에 출범한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이라 칭함)여성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5개 여성단체가 여기에 참여하여 남남갈등 극복과 남북교류를 위한 공동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민화협은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보수에서 진보까지를 망라하여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남남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을 시도하였다. 초기에는 민화협이 관변단체라는 오해도 받았고, 과거 통일운동을 주도하던 진보그룹이 보수단체와의 합의를 중시한 나머지 활동의 진보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또한 초기의 대화나 만남의 과정에서 조야함이나 시행착오도 눈에 뜨였다. 그러나 민화협 활동을 통해서 과거에는 한 자리에 앉기조차 거부하였던 보수와 진보인사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됨으로써 남남대화를 활성화하였고, 보수적인 단체들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노골적인 반대행동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민화협 여성위원회의 활동이 그리 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먼저 여성들도 서로 만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간의 남남갈등이 통일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데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대화의 기회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

또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민화협이 종단, 통일연대와 함께 성사시킨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통해 성사시킨 여러 차례의 통일대회에 여성들이 부문운동으로 참석하여, 북의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여성들도 보수와 진보세력이 함께 북을 만나고, 북에 대한 입장조율을 공동으로 모색하였던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10월 16-17일에 열린 '남북여성통일대회'의 성사를 매개해준 일도 민화협과 여성위원회 활동의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평화운동의 문제의식이 1970년대 제일 먼저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1998년 봄호, 45면

면, 이를 조직적 발전으로 연결한 것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었다. 그러나 이 단체가 평화 뿐 아니라 통일운동까지도 포괄하였던데 비해, 순전히 평화주의자의 운동체로 출발한 조직들도 김대중 정부시기에 탄생하였다. 1997년 5월에 오키나와, 1998년 워싱턴, 1999년 헤이그, 2000년 오키나와에서 '군대,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두레방>, <평화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군사주의와 매매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연대> 등이 중심이 되어 2000년 7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주로 미군기지촌에서 미군범죄와 관련한 활동을 하던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형성된 이 네트워크는 주로 군사주의 문제를 여성과 관련하여 제기하면서, 우리 사회 내에서 군사주의에 의해 짓밟히는 여성인권의 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국제연대사업으로 일환으로 2001년, 2002년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국내의 활동으로는 군사주의와 여성을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9·11일 테러이후 설립된 또 하나의 여성평화운동단체로는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연대(Women Against War, WAW>를 들 수 있다. 2001년 9월 20일 발족한 WAW는 "전쟁의 피해자로 오랫동안 잊혀져 온 모든 여성과 장애인, 소수 인종, 성적 소수자, 어린이 그리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 및 단체들의 모임"임을 표방하였다. 주로 이 연대기구에는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월장', 여성신문, 여성주의 사이트 '언니네', 연세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한국여성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구성성분에서 드러나듯이 영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그간 아카데미즘에 머물렀던 여성주의자들이 전쟁의 위협이라는 전대미문의 현실에 즈음하여 실천을 표방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5]

그 외에도 통일운동을 실행한 단위로는 여성단체협의회나 그 산하 <여성통일안보촉진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을 꾸준히 수행해온 단체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어서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III. 여성통일운동의 활동과 사업

그간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의 단체들은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함께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여성조직들 중에서 통일보다는 평화문제에 집중하는 단체들도 있어서, 한국여성평화통일운동을 분석하는

5)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아프간 여성영상제 '전쟁, 폭력, 여성' 자료집, 2001. 11. 16-17, 38면

이 장에서도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을 분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또한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사이에는 지향하는 목표나 관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드러나기도 하므로 여기에서는 양자를 따로 서술하는 것이 적합할 듯 하다.

1)북한동포돕기사업

김대중 정부시기에 여성통일운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행한 사업은 <북한동포돕기>이다. 1997년 8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공동으로 '밥 나누기 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여 탈지분유(삼양사) 26톤(약 1억 5천만 원 상당)을 북한 <민주여성동맹>과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실행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또한 2001년 1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공동으로 '북한 임산모와 어린이돕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12월 29일 인천항에서 남북화해와 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마음을 담은 산모, 아동용 내복 1만 2천벌을 북의 <민주여성동맹>, <조선여성협회>, <민화협 여성위원회>에 지정·기탁하였다. 이즈음에 <교회여성연합회>, <YWCA>, <원불교여성회>도 내복을 보냈다. 또한 2001년에는 <한국여성지도자연합>의 김윤덕총재가 북을 방문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여성위원회>가 상설적인 여성조직은 아니지만 양적으로는 북에 가장 많은 물품을 기탁하였다. 그 외에도 이곳저곳에서 북한을 돕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으나, 여기에서 일일이 다루지 못하였다.

여성이 수행한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총액으로는 일반 민간단체가 지원한 액수에서 보잘것없는 것이어서, 여성의 낮은 경제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교회와 종교단체의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이런 여성의 노력이 여성의 이름으로 가시화되지 않아서, 그 기여도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렇더라도 이 운동은 여성들로 하여금 남북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북의 여성을 자매로 받아들이는 여성통일운동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모색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었다.

2) 남북 여성 교류

남·북·일본의 여성들이 1991-1993년 사이에 동경, 서울, 평양에서 4차례에 걸쳐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가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여성간의 교류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특히 앞의 토론회가 민간으로는 처음으로 판문점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갔고, 민간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남북 여성들이 만나는 모임이었고, 휴가 중이던 김일성 주석이 직접 평양으로 돌아와 여성대표에게 만찬을 베풀었던 까닭에, 각 일간지가 이 행사를 사진과 함께 1면 톱기사로 대서특필 한 바 있었다. 이에 비해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펼쳐지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된 지난 4년 동안 오히려 양적인 규모로 따지자면 남북여성교류가 과거에 비

해 위축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는 남북교류가 주로 물자지원에 토대를 두었던 만큼 경제력이 빈약한 여성이 그만큼 교류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대중 정부시기동안 격조하였던 여성의 남북교류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통해 겨우 명맥이 유지되었다. 이미 1998년 베이징에서 열린 '종군위안부문제와 여성의 존엄'이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일 3자 회합에 이어, 2000년 동경 국제전범여성법정, 2002년 남·북·일간의 평양토론회를 통해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와 지원활동이 계속되었다.[6] 2000년 6월 13-15일의 정상회담에 동반하였던 이희호 여사와 북측 여성들이 만난 자리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 여성위원회>가 추진하던 '한민족여성대회'를 개최하자는 대화가 오고갔다. 2000년 10월에는 북한노동당창설 55주년 기념행사에 남한의 시민사회운동 인사 40여 명을 초대하는 데에 여연 대표로 지은희, 이경숙, 정현백 3인이 참가한 바 있었고, 이 회의에서도 여성 별도의 부문 모임을 갖고, 북측 대표로 참여한 홍선옥씨와 2001년 3.8대회를 남북여성이 함께 치르자는 의견에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남북여성간의 만남은 2001년부터 진행된 두 차례의 6·15 남북공동행사(금강산)와 평양·서울에서 개최된 8·15 남북공동행사를 통해서였다. 이 행사에서는 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별도의 상봉모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상호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늘 그렇듯이 상봉모임에서 어떤 알맹이 있는 대화가 진척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자주 만나야겠다는 확신을 주었고, 남북 여성간에 자매애를 느끼도록 해주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 8.15 대회에서는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2001년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여한 여성대표들은 행사기간 중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남북여성토론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 집권기간 동안 남북여성교류의 가장 큰 성과는 2002년 10월 16-17일 사이에 개최된 남북여성통일대회이다. 분단이후 최초로 열린 남북여성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높이 평가될 만하다. 1999-3년 사이에 개최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도 큰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이는 일본을 포함한 3자 회합이었고, 토론회 자체도 일본여성들의 중재가 없었다면,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비해 2002년의 남북여성통일대회는 남북이 자주적으로 여성대회를 준비하였다는 사실과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대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여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의 기

6) 이미 1993년 10월에 제2차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1993년 11월에는 평양에서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여성토론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군위안부 이슈는 남북여성교류를 이어준 가장 확실한 매개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본정신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될 만하다. 또한 이 대회에서 남북 여성들이 어떻게 각자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점에서 의미 깊은 대회였다.

이 행사는 토론회보다는 문화행사와 친교에 역점을 두고 치러졌다. 10월 16일 개막식에 이어, '6·15 공동선언 실천과 여성의 역할' 및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두 주제로 남·북 해외여성의 간단한 발표로 이루어진 토론회가 열렸다. 이어서 '남북 여성통일대회 기념 수예 및 미술전시회'가 있었고, 이는 유희·오락경기, 공동연회, 부문별 상봉모임(여성단체·통일단체·경제·노동·농민 여성정책 등), 합동예술공연, 폐막식, 공동산행, 전송행사로 이어졌다. 특히 유희·오락경기에서는 문화행사에 대한 북의 정성스러우면서도 치밀한 준비가 돋보였다.
(평가포함)

3) 통일교육

지난 4년 간의 통일운동에서 가장 중요시 간주되어야 할 과제는 통일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미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남북 간의 화해무드가 고조되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통일교육의 방향전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민간통일운동단체에서도 어떻게 통일교육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여성단체들에서도 정치나 통일문제 등의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들을 위해 어떻게 통일교육을 수행해야 할지가 급박한 과제로 다가왔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2000년 11월 7일에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이장원, 김정수 등의 한국 측 참여자 외에도,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ly Service Committee, AFSC)에서 Karen Lee가, International Alert에서 Ancil Adrian Paul이 참여하여, '평화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AFSC의 평화교육'과 '여성과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해주었다. 2000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전북여연, 대구여성회,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부천 여성의 전화, 부천 여성노동자회, 함께 하는 주부모임 등이 참여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원 산하에 <통일교육협의회>가 설립되면서,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돋보이는 점은 기존의 지식 전달위주의 방법을 탈피하고, 좀 더 쉽게 교육대상자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문화예술단 <다라>에서 공동 기획한 통일인형극 상연이었다. 어린이 통일인형극 '땅땅이와 슝슝이'는 전국 15개 지역에서 2500명을 대상으로 상연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소재나 줄거리 자체가 단순하고, 배경분위기가 너무 우울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으나, 통일교육을 대중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이었다. 단지 아쉬운 것은 본래는 어린이가 인형극을 보는 동안,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통일교육의 또 다른 색다른 방법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사이버 평화축제-공모전을 꼽을 수 있다. 배너, 캐릭터, 삼행시, 행동실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당선되는 사람에게 시상을 하였고, 사이버 퍼즐도 시도하였다. 이런 사이버 공모전은 네티즌들 사이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식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마찬가지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사이버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여, 2001년 8,9월 총 10강의 사이버 강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0년 8월 9일 '청소년를 위한 통일한마당: 통일아 노~올~자'를 개최하여, 통일과 청소년 축제를 결합하는 형식을 개발하고자 하였다.[7]

앞에서 언급한 대로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통일인형극이나 사이버 통일교육과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는 교육의 대중화를 지향하였다기보다는, 주로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치우쳤다. 이는 당장 적은 인원과 격무에 시달리는 민간단체로는 통일교육보다 더 화급한 투쟁해야할 이슈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통일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참석인원을 모으기도 용이하지 않았다. 앞으로 여성통일운동단체가 여성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일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도 확보해야겠지만, '통일문제'라는 딱딱한 주제를 여성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일상적 이슈로 전환하려는 창의적 노력이 필요하다.

4) 여성통일운동의 방향모색과 남남갈등의 극복

여성통일운동의 방향모색을 위해 시도된 가장 주목할만 한 사업은 여성평화통일포럼의 개최이다. 2000. 5-6월 모든 국민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을 즈음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공동으로 여성평화통일포럼을 준비하여, 각계 여성을 모아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여성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의 기회를 가졌다. 이후로 여성평화통일포럼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 의해 기획·주관되었고, 이는 정례화 되어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토론모임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1차 포럼에 참여하였던 여성과 단체들은 정현백이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하여,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여성의 요구>를 작성하여 언론기관, 통일부, 청와대 등에 제출하였다. 이 요구안에서는 1)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북한 방문시 여성을 가능한 한 많이 참석시키고, 2) 정부 관련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30% 보장하

7) 한국여성단체연합, 제15차 정기총회 보고서, 2001. 1. 8, 108-9면

고, 3) 통일부에 여성관련 부서를 만들고, 여성특별담당관을 임명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로 이 포럼에서는 '북한여성, 어떻게 만날 것인가', '독일통일과 여성인권' 등의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8]

여성평화통일포럼의 목적은 여성평화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모임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지닌 여성들이 모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목적도 지향하고 있어서, 남북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남남갈등을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場으로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화의 場에서 여성활동가들이 느끼는 것은 평화통일운동에 있어서 세대차 뿐 아니라 절대적인 정보의 부족을 절감하게 되어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과정보다는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는 통일교육이 여성들에게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IV. 여성평화운동의 발전

한국 여성운동은 이미 70년대 말이래 지속적으로 평화운동을 전개해왔고, 여성들이 앞서서 평화운동을 시작했다. <교회여성연합회>가 주관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활동,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기독교여민회>가 주관한 '여성평화한마당', 핵발전소건설 저지운동, 핵무기와 군사기지 철수운동, '패트리어트 미사일 설치를 반대하는 여성모임', '방위비 삭감을 위한 연대모임', 1987년의 최루탄추방운동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성들의 평화에 대한 높은 감수성과 평화운동은 가부장적 언론에 의해 무시되었고, 또한 이 운동은 세인의 관심을 끌 정도의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상징적인 의미만을 지닌채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은 이런 여성평화운동의 전통에서 발전해왔기에, 여성이 통일운동은 여타 통일운동과는 관점이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9]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여성통일운동에 박차가 가해지는 것과 병행하여 향후 통일문제에 대한 여성적 접근도 평화주의적이고 성평등적인 관점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통일운동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창립 초부터 평화운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더 역점을 두었다. 이에 비해 <한반도여성평화네트워크>나 WAW는 초기부터 활동의 중점이 여성평화운동에 놓이면서, 전쟁 반대나 미군범죄 문제, 여성과 소수자인권 등에 관심

8)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1년 정기총회 보고서, 32면 참조
9) 정현백, 통일운동과 여성주의 , 『창작과 비평』, 109호(2000) 참조.

이 집중되었고, 통일이나 남북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 정치적 실천행동

여성평화운동에서 <여성단체연합>이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도 정치적 실천을 중요하게 간주하여왔다.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활동으로는 평화군축전문가 웍샵, 평화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선언 및 거리행동, 기자회견, 주한 미군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축소촉구대회, 일미 신가이드라인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를 위한 행동, 국감시민연대 국방위원회 모니터활동, FX사업에 반대하는 시민행동, 미군장갑차여중생압사사건에 대한 항의집회 등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교회여성연합회>는 공동으로 '소파개정 시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국회결의촉구 청원안'을 제출한 것은 주목할만한 사안이다.[10] 이런 정치행동은 대체로 다른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들만의 연대로 꾸려지는 운동도 적지 않았는데, 소파에 여성인권보호조항 삽입하는 문제에 접근하거나, 아프간 전쟁에 대한 여성들만의 평화시위를 개최하기도 하고, 미 대사관 앞에서 1달간 진행되는 1인 시위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20일, 아프간 전쟁이 시작된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신대대책협의회, 교회여성연합회 등이 주관하고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전쟁중지와 평화해결을 촉구하는 여성평화침묵시위'는 여성의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세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11] 또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오마이뉴스>와 함께 시도한 '평화쪽지 날리기 운동'은 평화운동과 사이버 대중운동을 결합한 모범적인 사례였다.

그 외에도 WAW도 2001년 10월에 신촌과 광화문, 부산에서 건널목시위를 시도하였다. 또한 이들은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함께 쓰는 성명서: 4조3천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이라 명명한 운동을 전개하면서, '군사력은 곧 안보를 보장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서, 새로운 안보와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12] 그 외에도 이 단체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표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구체적으로 "여성단체와 여성주의 인터넷 사이트, 여성언론,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새로운 여성연대체'의 가능성을 실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이 연대기구 안에서는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http://www.freechal.com/kwaw)를 통해 개별 회원이 언론, 번역, 대학, 사이트, 학술, 홍보 등에 자원하여 요구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개별회원이나 연대 단체들이 함께 집회, 서명운동, 학술 토론회 및 사이트 운

10) 한국여성단체연합, 제15차 정기총회 보고서, 110면 참조
11) 한국여성단체연합, 2002년 제16차 정기총회 보고서, 109-10면
12) 조이여울, 여성과 소수자의 눈으로 본 평화담론, 『여성과 사회』 14호, 61-2면

영을 통해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성에 기초한 열린 조직들은 이미 70년 대 이후의 구미의 여성운동에서 시도한 방식들에 새로이 사이버공간을 동원한 조직형태가 결합한 것인데, 주로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선택한 이 조직과 활동방식은 앞으로 한편으로는 획일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급속하게 개인주의화되는 젊은 세대을 겨냥한 운동방식으로서 그 한계와 가능성을 실험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2) 평화를 위한 문화적 실천

평화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도 전개되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1998년 10월부터 '내일을 여는 청소년 문화제: 애들아 놀자 평화의 물결을 타고'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하였다. 문화적 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노원구와 청소년이 집결하는 대학로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1999년 8월-10월 사이에는 비폭력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평화문화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페스티발도 펼쳤다. 또한 평화명상팀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움직이는 학교'를 통해 평화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WAW에서는 아프간 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면서, 반전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WAW는 아프간 전쟁 1주년 행사에서도 다양한 상징과 문화 퍼포먼스를 통해 '전쟁과 여성'이 지니는 함의를 문화적으로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평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행사는 평화기행이다. 1998년 이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나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시도한 '분단현장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은 가족 단위의 행사여서 대안적인 여가문화로 기능할 뿐 아니라, 평화의식을 대중화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사업은 지속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데, 이는 여성운동단체들이 심각한 실무부담으로 인해 이를 추진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3) 평화확산을 위한 교육 및 연구활동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1997년 6월 17-20일에 미국친우봉사회의 후원으로 국제여성평화심포지움 '21세기 평화와 여성운동-여성·평화·화해'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분쟁 중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대표나 독일, 동티모르, 남아연방 그리고 WILPF의 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의미있는 국제행사였다.[13] 또한 평화군축이 1998년의 중점사업이었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군축의정감시활동을 위한 웍샵, 국방비예산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평화군축전문가 웍샵,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웍샵, 여성평화운동 정립을 위한 웍샵 등을 개최하여, 평화운동의 관점과 쟁점을 정리해내는데 큰

13) 한국여성단체연합, 1998년 제12차 정기총회 보고서, 1998.1. 22, 85면 참조

역할을 하였다. 어느 시민·사회단체보다도 적극적으로 군축과 평화 실현에 참여하였지만, 여성단체들이 지니는 한계는 실제로 여성 중에서 군축, 군사문제 전문가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군비와 관련된 토론이나 운동에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정확하고도 세분화된 정보가 필요한데, 여성단체들은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평화운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으면서도 사회 내에서의 전반적인 논의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한다면 여성들은 평화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하였고, 일정한 성과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평화교육 방법론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족회의>가 그 실무자를 선발하여, 미국친우봉사회와 공동으로 '갈등해소와 관용교육'을 2년여에 걸쳐 실시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국내에 갈등해소와 관용교육을 담당할 전문가가 없는 관계로, 해외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교육생에게 미국 현장방문교육을 실시한 것은 국내 평화교육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간 특정 여중생과 교사집단, 운동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갈등해소와 관용교육'이 공교육 기관인 서울시교원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앞의 교육과정을 거친 실무자를 파견한 것은 여성평화운동의 큰 성과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계속 실시하고 있는 '평화아카데미'도 평화교육의 중요한 실천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평화와 관련된 연구활동으로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창간한 <여성과 평화>의 출간이다. 이미 2호가 발간된 이 책은 여성평화운동의 이론을 집결하고, 이를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를 고민한 노력의 결과이다. 여성평화운동의 이론적 성과를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도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은 2002년 11월 통일교육원 총서로 출간되었다. 이 책이 지니는 의미는 어떻게 기존의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결합할 것인가를 고민한 책이고, 이 책의 소통이 우리 통일교육을 평화교육의 관점과 실행방안으로 견인하는 데에 이바지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공존'의 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할 것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하였던 '무궁화와 진달래모임'이다. 이 모임은 98년 북한이탈여성주민과의 대화모임으로 출발하여, 1999년 2월 24일에 '무궁화와 진달래모임'으로 발전하였다. 이들을 소수자 인권문제로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서로 학습해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나, 프로그램 진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어, 북한이탈여성만의 모임으로 분리해나갔다.

(4) 국제연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평화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연대일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상황은 미국을 포함한 주변강대국의 정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약소국은 평화를 위해서 국제연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미 언급한 대로 여성평화네크워크가 결성되어 있고, 이는 2001년 과 2002년에 걸쳐 '군사주의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국제인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나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국제연대에 크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유엔여성지위위원회, WILPF, International Alert 등과 상시적인 연대활동을 벌리고 있고, UNESCO나 아셈 민간포럼과도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프간 전쟁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사이버 시위나 사이버서명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국 평화운동의 국제연대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역할은 적지 않다.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운동의 국제연대활동에서 남성활동가들이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여성들이 국제연대를 감당하고 있는데, 평화운동의 분야에서도 이는 예외적이지 않다.

V. 여성통일평화운동의 쟁점

평화를 통한 통일로

지난 30년 간의 군부독재체제의 탄압 하에서 우리 통일운동은 정치지향적인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더불어 통일방안 중심의 통일논의나 남북 정치권력의 형식적·기계적 결합을 중심으로 한 통일담론이 그 중핵을 이루었다. 또한 통일운동 내의 문화도 남성적·가부장적이었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과 함께 이제 평화공존체제의 모색이 우리의 일차적인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적대적 군사대결 구조를 완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따라서 통일운동을 포괄하는 좀더 확장된 범주로서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제기할 시점에 이르렀다. 작금의 통일운동이 화해·협력체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평화운동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서 평화운동이 되기는 힘들다. 우리 통일운동은 민족주의 담론이 여전히 중요한 동력이며, 현재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운동의 새로운 문제의식과 공유하는 바도 적다. 그러나 한 국가의 안보는 이제 국제적 연대나 제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기에, 시민·사회운동은 통일문제를 '국제적 시민공동체'의 건설과 연관지어 사고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기아와 국제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북한을 생각하면, 이런 발상 자체가 '한가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정의 중요성이 생략된 운동의 비극적 결말을 자주 보아왔기에, 평화운

동의 문제의식이 우리의 통일담론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만 진정한 '내적 통일'이 가능해진다고 항변하고 싶다. 따라서 여성평화운동 혹은 여성운동이라면 민족의 운명과 동북아의 평화를 가늠하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운동방식, '통일을 통한 평화로'보다는 '평화를 통한 통일로'를 표방해야 한다.

보다 확장된 평화의 개념

여기에서 평화개념은 단지 전쟁을 종식시키는 의미의 소극적 평화를 의미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때로는 가시적으로 때로는 비가시적이지만 모세혈관처럼 퍼져있는 폭력에 저항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여기에서 폭력이란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 혹은 잠재적 폭력을 포함한다. 평화운동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상호 공존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만약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 지구상에는 영원히 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의 개념을 잠재적, 구조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동 내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화의 개념을 확장할 경우, 사실 한국의 여성평화운동도 군사·안보문제 외에도 성차별, 생태계문제, 소수자의 인권문제 등을 함께 포용하고, 운동의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14] 그러나 현재로는 이런 문제들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고, 현재 여성평화단체의 여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오히려 앞에서 제기한 이슈들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를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젠더 관점의 결합문제

여성들이 하는 평화운동은 기존의 운동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흔히 "여성은 생활환경이 타인을 배려하는 여건에 있으므로, 여성은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더 강하고..." 등등의 자기규정과 함께 여성평화운동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평화운동에 참여할 경우, 남성들이 해온 평화운동에 비해 어떤 점이 다른지, 젠더 관점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젠더와 평화관점이 결합된 평화운동은 어떻게 다른 접근방식을 가져야할 지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이는 여성평화운동이 자기정체성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좀 더 치열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말한 '평화를 통한 통일로'가 여성적 시각에서 제기한 평화운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부장적인 운동문화에 대한 성찰적 비판도 이런 시도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화의 모색

14) 이런 맥락에서 여성평화운동에 정신대대책협의회의 활동을 포괄하는 시도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안보와 군사문제,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여성평화운동을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이 글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김양희·양애경·정숙경,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45-46면 참조.

최근에 와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평화운동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관점의 중요성과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 내에서 평화운동의 대중화는 요원하다. 평화운동은 통일운동보다는 대중화가 조금 용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전략과 방법론을 통해 대중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을 보다 확산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대중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부와 민간기구가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에 와서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이 내용을 보완해가고 있어서, 통일교육에서 NGO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냉정한 자기분석과 함께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국제연대의 강화

통일평화운동에서,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국제연대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제연대활동은 절실한 이슈(burning issues)가 생겨야 활성화되었고, 그때마다 일회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런데 한반도나 동북아의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은 이슈 중심이 아니라, 원대한 목표를 놓고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해갈 단체나 조직이 상시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북한, 중국 등 북방국가들과는 일본이나 미국, 혹은 다른 동아시아국가들의 매개를 통해 추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고, 우선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과는 지속적인 교류나 연대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비정부기구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반일감정이나 반미감정 때문에, 혹은 언어문제와 문화적 고립성 때문에 국제연대에 적지 않은 난관과 장애가 있다. 전문가도, 예산도, 언어소통능력을 지닌 활동가도 턱없이 부족하여서, 한국의 시민운동단체들은 국제화과정에서 낙후되어 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국제회의를 유치하지만, 형식과 접대에만 신경을 쓰고, 알맹이 있는 토론과 합의사항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거기에다가 대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비용절감을 위해 실무자를 최소화하는 까닭에, 과로에 시달리는 실무자를 국제연대에까지 파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쟁을 예방하고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지역 간 연대활동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우선 미국, 일본, 유럽에서 평화운동에 적극적인 단체와 주요 인사들을 파악하여 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야 한다. 서로간에 운동방향, 전략, 이념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조직으로 묶기보다는 느슨한 연대체 형태가 좋다. 이

런 틀 안에서 서로간에 정보교환이나 상호방문을 통해 유대를 돈독히 하고 긴급한 사안의 경우, 공동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9·11테러와 아프간 전쟁이후 평화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시민운동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이므로, 필요가 있을 경우 언제나 공동캠페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왕에 있었던 다양한 단체들, CCA·YMCA·ARENA·Peace Alliance·Human Right Network를 활용하는 것이 손쉬울 것이고, 경우에 따라 유엔기구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항상 평화운동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조직가(Corordinator)와 핵심그룹(core group)이 있어야 한다. 최근 아프간 전쟁이후 결성된 Peace Alliance에서는 홍콩의 ARENA와 Global South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핵심그룹이 특히 교회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되면, 평화운동의 확산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로, 연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연락사무소, 실무자 1-2인, 재정이 필요하다. 또한 각 나라의 평화단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영문 소식지(News Bulletin)나 잡지 출간이 필요하다. 또한 평화를 둘러싼 이슈에서는 그 대응이 항상 급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두어 신속한 의견 수합과 실천적 행동이 가능해야 한다.[15]

앞에서 제기한 이런 세 가지 과제를 실현하는 데에 여성들이 기왕의 활동기반을 근거로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 설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대안적인 운동문화

여성평화통일운동 내에서는 대안적인 운동문화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운동 내에 왜곡된 운동문화의 유산이 없는지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자기점검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횡적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 세대간의 대화와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노동방식은 여전히 '압축적 고도 경제성장'의 심성구조에 젖어있는 것이나 아닌지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평화는 목표지점에 달성되는 것이기보다는 평화는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적어도 평화운동을 하는 여성들이면, 타인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대안적인 운동문화를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부담을 여성평화운동단체는 안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뿐 만 아니라 일반 통일평화운동과 연대하는 과정에서도 가부장적

15) 이삼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시민단체 국제연대 형성에 관하여, 평화포럼 『남북 평화를 향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자료집』, 2001. 11. 15 참조.

이고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비판하고, 이를 바꾸어가려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평화주의 관점의 개입과 함께 패거리의식, 헤게모니 장악 욕구, 절차의 비민주성 그리고 성차별이 사라진 운동문화를 지향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미래사회의 희망을 읽어야 한다.